

# 공공부문 수지 2년째 흑자 행진

### 2015년 공공부문 계정 “총수입 전년비 3.4%↑ 총지출 1.1%↑ ‘33.8조’ 흑자”… “비금융 공기업 첫 흑자”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수입이 지출을 웃돌면서 2년째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735조6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24조2000억원(3.4%)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701조8000억원으로 7조8000억원(1.1%) 증가에 그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의 수지는 33조8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수지가 흑자를 보인 것은 이번이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다.

공공부문의 수지는 2007년 17조6000억원 흑자를 나타낸 뒤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이유는 일반 정부에서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을 비롯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금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다, 비금융공기업의 수지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특히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일반 정부의 총수입은 526조6000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32조5000억원(6.6%) 증가했다. 총지출은 건강보험 급여 등 사회보험 지출과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 지출이 늘면서 29조3000억원(6.2%) 증가한 50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정부의 수지는 22조2000억원 흑자 규모가 2014년(18조9000억원)에 비해 3조3000억원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는 적자,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시현했다.

중앙정부는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적자규모가 25조2000억원으로 2014년(29조6000억원) 보다 줄었다.

지방정부도 조세수입이 늘었으나 복지 지출이 더 크게 늘어 흑자 규모가 4조5000억원으로 2014년(5조7000억원) 보다 축소됐다. 사회보장기금은 국민 연금을 중심으로 42조7000억원 흑자를 내며 전년 수준을 지속했다.

공기업의 경우 비금융 공기업은 에너지 공기업의 매출이 줄어든 영향 등으로 지난해 비금융 공기업의 총수입은 182조8000억원으로 2014년(189조2000억원)에 비해 3.4% 줄었다. 다만 유가 및 가스 도입단가 하락으로 생산비가 줄고 한전 부지 매각으로 토지 등 순취득 지출이 감소하면서 총지출 규모도 2014년(192조3000억원) 보다 9.9% 줄었다.

## 직원 사망보험금, 유가족 동의 의무화

### 금감원, 단체상해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직원 사망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원 사망해 나온 단체 상해보험금을 몰래 챙기는 기업 대표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VR로 즐기는 롤러코스터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을 찾은 시민들이 VR 체험을 하고 있다.

이제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9조5000억원으로 전년(-3조1000억원)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비금융공기업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수익구조 자체가 좋아졌다고 보기는 일시적으로 지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신규투자가 감소하고 한전 부지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토지 등 순취득이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 공기업은 저금리 영향으로 총수입이 전년에 비해 1조1000억원(-3.2%) 줄어든 3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중앙은행과 예금취급기관 등의 지급 재산소득 축소에 기인해 전년 대비 1조7000억원(-5.2%) 감소한 3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2조3000억원 흑자로 전년보다 흑자 폭이 6000억원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수지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를 기록했다. 한은 측은 그러나 이는 영국(-4.4%), 호주(-2.5%) 등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정부의 수지가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1%)과 유로존 평균(-2.1%)을 밑돌았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지난해 0.8%로 전년 -0.1%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뉴시스

이제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9조5000억원으로 전년(-3조1000억원)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비금융공기업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수익구조 자체가 좋아졌다고 보기는 일시적으로 지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신규투자가 감소하고 한전 부지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토지 등 순취득이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 공기업은 저금리 영향으로 총수입이 전년에 비해 1조1000억원(-3.2%) 줄어든 3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중앙은행과 예금취급기관 등의 지급 재산소득 축소에 기인해 전년 대비 1조7000억원(-5.2%) 감소한 3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2조3000억원 흑자로 전년보다 흑자 폭이 6000억원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수지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를 기록했다. 한은 측은 그러나 이는 영국(-4.4%), 호주(-2.5%) 등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정부의 수지가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1%)과 유로존 평균(-2.1%)을 밑돌았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지난해 0.8%로 전년 -0.1%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뉴시스

## 7월 수입차 판매 24% 감소

### 폭스바겐 10위로 급락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폭스바겐의 인증 취소 사태 파장 속에 지난달 수입자동차 판매가 큰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스바겐의 경우 판매량이 4위에서 10위권으로 급락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달 국내에서 신규등록된 수입차가 1만5730대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등록대수인 2만7070대보다 24.0% 감소한 실적이며 지난 6월(2만3435대)에 비해서는 32.9%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적용되던 개소세 인하가 지난 6월 말에 종료된 데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일부 차종에 대한 환경부의 인증 취소 사태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누적 등록대수는 13만247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만5399대보다 5.7%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 4184대 ▲BMW 2638대 ▲아우디 1504대 ▲포드 1008대 ▲랜도버 847대 ▲렉서스 741대 ▲toyota 677대 ▲미니

647대 ▲볼보 453대 ▲폭스바겐 425대 ▲혼다 412대 ▲크라이슬러 411대 ▲닛산 382대 ▲푸조 370대 ▲재규어 331대 ▲포르쉐 308대 등이었다.

특히 전월만 해도 1834대가 등록돼 4위를 기록했던 폭스바겐은 지난달 불과 425대 등록되는 데 그쳤다. 지난달 25일부터 인증 취소문제로 연루된 차종의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한 탓도 있지만 전 반적으로 이번 사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배기량별 등록대수는 ▲2000cc 미만 8449대(53.7%) ▲2000cc~3000cc 미만 6034대(38.4%) ▲3000cc~4000cc 미만 845대(5.4%) ▲4000cc 이상 385대(2.4%) ▲기타(전기차) 17대(0.1%)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유럽 1만1817대(75.1%) ▲일본 2434대(15.5%) ▲미국 1479대(9.4%) 순이었다.

연료별로는 ▲디젤 8286대(52.7%) ▲가솔린 6246대(39.7%) ▲하이브리드 1181대(7.5%) ▲전기 17대(0.1%) 순이었다.

지난달 베스트셀링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E 300(1133대) ▲비엠티블유 520d(448대) ▲메르세데스-벤츠 C 220 d(445대) 순이었다. /뉴시스

### 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 '삼성·교보생명' 제재 착수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형보험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절차에 들어가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나머지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에 나선 방침이다.

4일 금융당국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27일부터 진행한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주 마쳤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를 파악하고, 지연이자 계산이 적정했는지를 들여다봤다. 제재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보험사의 귀책사유 등이 있는지도 살폈다.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78%(2천393억원)에 이른다. /뉴시스

보험사들은 특약에서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보고했다.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한 상품까지 포함하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에서 지연이자 비율이 11.9%로 다른 회사에 비해 크게 낮아 이자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보험회사들은 약관에 따라 지급을 미룬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연 10% 내외의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 검사 결과를 정리하는 대로 이달 말에서 다음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미지급금이 많은 한화생명·알리안츠생명 등이 거론된다.

지금까지 14개 생명보험사 중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중소형사 7곳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뉴시스



##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